

“3월13일 탄핵 마지노선”... 파장 예고

박한철 소장, 퇴임 앞두고 작심 발언...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 심각한 우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박 헌재소장이 퇴임 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을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을 다

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식 상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소장이 공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식 이후에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공식 사태마저 우려의 표시를 했다.

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를 단지 한 사람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변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종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며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부분 채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방어진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이전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준비절차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된 것”이라며 “이미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계속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러나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뉴스

최순실 결국 특검 소환

“특검이 자백강요, 너무 억울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특검팀에 소환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한 이후 약 1달 만이다.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는 기자들을 향해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또 최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최씨가 출석하는 재판이 24~25일 이틀간 예정돼 있고,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라는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와 장시호(38·구속기소)씨,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출석해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10일로 연기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은 최씨를 불러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뇌물수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반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

정동영 의원, 최저 시급 8750원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에 대한 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8,750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 만원 정도이며, 최저 임금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342만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0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동영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도 풍성한 저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계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알바생 등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최저 임금조차 개혁하지 못하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이 꼭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정동영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적 연합정부 수립을 목표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며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천정배 “개혁적 연합정부 구성으로 국민혁명 완수”

도의회에서 4단계 로드맵 제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이 국가균형 발전의 지름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혁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 전 대표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적 연합정부 수립을 목표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며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가 제시한 4단계 로드맵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개혁연대의 구성과 개혁적 연합정부 구성 합의, 개혁적 연합정부 창출, 개혁적 대통령과 개혁 국회에 의한 강력한 개혁 실행 등이다.

천 전 대표는 이날 호남출신을 강조한 뒤, 개혁적 연합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를 모르지 자신의 집권만을 위한 전략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개혁 실현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됐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대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국회 상황에서 국가적 개혁과제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들의 ‘국민주권’을 선

언하고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당장 도입,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지역이 늘 권력에서 소외되는 것은 승자독식의 현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지름길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을 동화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인재용 기자

민주, ‘대선 경선룰’ 당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제’와 ‘모바일투표제’ 등이 담긴 대선후보 경선 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하권공동경선’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경선을 확정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헌당규가 예비후보등록을 조속히 시작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후보 세 사람이 이야기한 ‘공동경선’ 제안에 대해 당에서 화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선규칙으로 답을 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지도부가 정세를 보고 당의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위 결과는 별도로 각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민주당 “관변단체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청와대로부터 관제 데모 지시를 받아왔다는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의 폭로와 관련, “늦었지만 관변단체의 존재와 국가재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 지시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유독 심해졌다”는 자유총연맹 전 고위관계자의 인터뷰로 집권당에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부의 관변단체 활동이 줄곧 이어져왔다는 의심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변단체는 정부에 의해 의

도적으로 지원·육성되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라며 “바르셀로나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2015년 기준 216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변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재정으로 관변단체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며 “청와대가 무서워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증언할 만큼,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정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사건이 불거진 것도 불과 지난해 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뒤발을 우려해 관변단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이 무색한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2차 전투 운운하며 이념전쟁에 자유총연맹의 조직을 이용한 박근혜 정권과 정권의 수족을 자칭하며 이념전사로 앞장선 자유총연맹 간의 검은 뒷거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정산은 멀리 있는 구호가 아니다”며 “정치적 편향된 단체의 정상화야말로 적폐정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스는 자유총연맹 고위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허헌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이 관제 데모 지시 실무를 맡아 왔으며 집회 개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뉴스

민주당 “최순실 특검, 법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박병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he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한민국적 적폐가 다 특검으로 제보되고 있고 신고가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수사를 해야 될 양들이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하고, 그 수사범위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오래 묵은 병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박원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식으로 연장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요구하며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수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

이용호 ‘보이스피싱·대표통장 방지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5일 ‘보이스피싱 및 대표통장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표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및 대표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 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출스팸전화 방지법’과 함께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법·대표통장 방지법’, 일명 ‘3중사법안’을 통해 스팸 공해와 금융피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정인화·장정숙·주승용·남인순·소병훈·김광수·황주홍·김삼화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용호 의원